

주가가 올라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동서남북

김은정

경제부 차장



주가지수가 하루에 99.9% 폭락한 나라가 있다. 이 정도면 나라 망하는 수준인데도 아무렇지 않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사실에 별 관심이 없는지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더는 놀랍지 않은 세상이 됐다. 베네수엘라 증권거래소는 지난 7월 25일 53만 2713포인트로 마감한 대표 지수 IBC를 다음 거래일에 532.71포인트로 놓고 거래를 시작했다. 지수를 1000분의 1만큼 낮추는 일종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변경)’을 단행한 것이다.

한때 세계 4위 부국이던 베네수엘라가 후진국으로 추락한 스토리는 세계인이 안다. 석유 의존도 과다, 정권 부패, 포퓰리즘을 앞세운 좌파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는커녕 4000달러에도 못 미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8년 13만%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화폐 개혁으로 물가가 잡히는 듯했지만, 올해 다시 물가 상승률이 200% 넘게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는 주가도 폭등시켰다. 가진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본 현자들은 주식·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 모았다. 2018년 주가 상승률이 무려 7만%를 넘었다. 올해도 주가는 500% 넘게 올라 지수 조정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47% 급등한 상태다. 하지만 이 나라 재미 누구도 부자가 됐다가나 행복해졌다 말하지 않는다. 자국 화폐 볼리바르 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고, 이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오늘도 후퇴하는 중이다.

베네수엘라가 걸어온 길은 되짚어보면 흑사라도 지금 우리가 그 초입에

주가지수 1000분의 1로 낮춘 포퓰리즘 국가의 섬뜩한 현실과 괴리된 증시는 허망할 뿐 주가 집착 말고 경제부터 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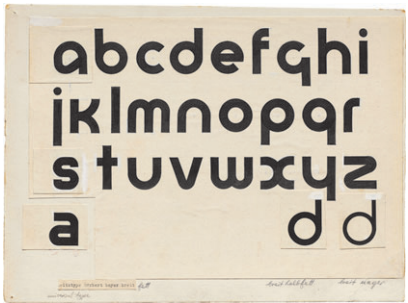
있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8조7000억원어치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뿌려진 지 한 달이 지나자, 많은 사람이 2차 쿠폰을 기다리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반짝 장사 잘되더니 도로 제자리”라고 아우성이다. 재정 할어 돈 뿌리니 쓸 돈이 없어서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다. 대법원이 유료화가 맞다고 손들어준 일산대교는 다시 무료화가 추진된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 나가려고 지사직을 던지며 마지막 으로 결제한 게 ‘민자 사업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였다. 노동자가 불법 파업

을 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결국 명문화됐다.

민주당 대선 캠페인 전면에 등장했던 ‘코스피 5000’ 공약이 이번 정부 내내 족쇄가 될 분위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 이상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주가는 국정 운영의 결과물일 뿐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경제와 괴리돼 주가만 고공 행진하는 게 어느 나라처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 바라는 일은 아닐 것이다.

돌아보면 크고 작은 부침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100년간 꾸준히 올랐다. 혁신을 멈추지 않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쌓이고 쌓인 위에 세계 투자자들의 기대가 보태진 결과다. 지금은 우리 기업들 공간에 나뉘 줄 게 좀 있는지 모른다. 지나치게 인색했던 기업 중에 배당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모두가 거위 배를 가르고 황금 알을 빼 먹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 단 한번 주가가 목표치를 찍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기업들의 벌이는 작년보다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펀더멘털이 아닌 유행성으로 만드는 5000포인트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구호는 접어두시라.



헤르베르트 바이어, 유니버설 서체의 원본 레터. 1925년, 종이판에 잉크와 구아슈. 31.8×23.5cm, 샌프란시스코 레터폼 아카이브 소장.

을 높였다. 획의 끝을 단순화하고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했으며, 심지어 대문자를 없애고 소문자만 사용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 서체는 오늘날 혁신을 표방하는 수많은 기업의 로고 속에 존재한다.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능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바우하우스와 바이어의 실험이 증명하는 것이다.

포스트ек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7]

탄생 100년 된 유니버설 서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기본 서체 목록에서 ‘Bauhaus 93’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는 예술·공예·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기능과 조형의 통합을 추구한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이자 학교였다. ‘바우하우스 93’은, 실제로 바우하우스 교수였던 헤르베르트 바이어(Herbert Bayer·1900~1985)가 1925년에 개발한 ‘유니버설 서체’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1925년은 바우하우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극우 민족주의가 득세하던 독일에서 정치적 압박과 재정난으로 존속이 어려워진 바우하우스

는 혁신적 산업 도시로 성장하던 데사우의 초청을 받아 학교를 옮겼다. 데사우에 새로 지은 캠퍼스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전면 유리 파사드로 구성되어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구현했고, 이 건물은 이후 현대 건축의 상징이 됐다.

1921년 바우하우스 바이마르에 입학해 클레와 칸딘스키에게 기초를 배운 바이어는, 졸업 직후 데사우에서 그래픽 디자인 교원이 됐다. 그의 서체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바우하우스의 합리주의 정신을 글자에 적용한 실험이었다. 정보 전달이라는 글자의 본질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식적 요소를 제거하고, 원과 직선 같은 기본 도형으로 알파벳을 재구성해 가독성

특검으로 상대 후보 없애 지방선거 이기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를 거명하며 특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일 “지금은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 청산과 중앙·지방 통합 정부를 완성할 파날레”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해방 지자체장들은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보면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회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특히 오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밀실서 주요 내용 정한 뒤 공청회 여는 ‘검찰 개혁’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 첫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주요 쟁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정은 이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을 정한 상태다. 법안 처리 시한까지 25일로 못 박았다. 그레놓고 여는 공청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형식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 입법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인지 논의하는 게 순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생략된 채 검찰 폐지라는 결론만 나와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세부적인 방안은 어떤 내부에서 비공개로 논의 중이다. 최근에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 장관, 윤호중 행안 장관이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그 결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기로 했

그런 민주당이 국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계엄을 엮어 수사를 요구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득표 계산 때문일 것이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광역지자체는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섰지만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던 지역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선 탈환해야 할 지역들이다.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등으로 출마를 검토 중인 사람들이 국회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것도 너무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에서 국힘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검도 자신들이 추천하고 임명하더니 내란재판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침해할 ‘소지’가 아니라 심각한 침해다. 특검과 특별재판부로 상대 당 후보를 제거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발상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다.

다고 박지원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를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공청회는 무엇 하러 여나.

대통령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줄곧 “줄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신중한 토론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날, 정청래 대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대통령과 당이 엮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로 사건이 있는지, 아니면 ‘약속 대런’을 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 책임을 묻어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된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수다. 대통령실도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했다. 공청회 한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더 해야 한다.

장관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될 사람들

최고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장관급이 아니라 일반 공직이라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란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완전 만취 상태였다. 그레놓고 교육감이 되자 음주 운전을 한 교직원 10명을 중징계했다. 내로남불이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다. 딸이 낸 책을 자신의 SNS에 홍보하며 “꼭 구입”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16차례 방북했는데 “학교 통일 교육이 힘든 이유는 반공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사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뭐라 할 건지 궁급하다. 그는 SNS에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을 공유하고, 북을 찬양하는 단행에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날을 ‘당탕절’로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속어를 썼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을 감싸는 글을 수차례 올렸을 뿐 아니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까지 공유했다. 모두 반(反)교육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상습 체납자다.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속세를 연체했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부부 공동 소유인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것도 14차례에 달한다.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바쁜 일정 탓’ ‘세금 납부 미숙’이라고 했지만 자기 집이 압류당할 때까지 세금 낼 시간도 없을 수 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세금·과태료를 미루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이런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후보자가 기업과 시장에는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두 후보자 모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 증인·참고인이 ‘0명’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투성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자고 하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사실상 없애는 방법을 쓰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교회는 미국 문명의 DNA

한국의 잭 스미스 조은석, 미국 건국정신의 핵심 건드렸다

미국, 종교 자유 찾아 영국 떠난 청교도들의 나라
미국적 가치와 자유의 성전이 바로 교회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을 설명했다. 우리 측 통역이 영어로 특검을 언급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의 말을 끊고 “혹시 그 특검이 정신 이상자(déranged) 잭 스미스 아니냐” “미국에서 두려한 것 아니냐” “그는 병든 사람(sick individual)”이라고 했다. 잭 스미스는 바이든이 대통령 시절 임명된 특검. 트럼프를 기소했으나, 트럼프 대선 승리 후 공소를 철회하고 사임했다. © 연합뉴스

【편집자 주】SNS에 보면 언론인이 아니면서도 기자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콘텐츠를 올리는 분들이 많다. 유튜브가 방송 몫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신문·잡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방송 시청률이 하락하고, 신문·잡

지 발행부수·열독률이 폭락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 같은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기존 주류 언론(레거시 미디어)이 주도하던 의제설정(아젠다 세팅) 능력도 감소되고 있다. KBS-중동동의 여론 조성 프레임 반경이 훌쩍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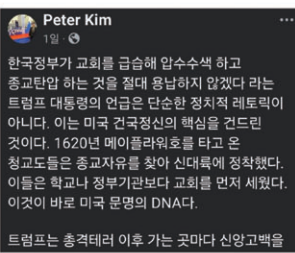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을 언론인·기자라고 한다. 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김연표 씨는 페이스북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다. 유려한 글 솜씨와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웅변한 기자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글을 Peter Kim이란 이름으로 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 탄생 후 몰아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 파장이 태평양을 건넜다. 한미 정상회담 소재로까지 등장했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문제를 애써서 해프닝 정도로 축소 보도했다.

Peter Kim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다음은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 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학교나 정부기관보다 교회 먼저 세워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종교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정착했다. 이들은 학교나 정부기관보다 교회를 먼저 세웠다. 이것이 바로 미국 문명의 DNA다.

트럼프는 총격 테러 이후 가는 곳마다 신앙고백을 하며 미국 기독교계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에게 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미국적 가치와 자유의 성전이다.

한국의 잭 스미스 조은석 특검이 오산 미군 기지를 무단 침입하고 교회들을 급습 압수수색한 것은 트럼프와 미국 보수층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트럼프가 조은석을 “정신 나간 잭 스미스”에 비유한 것은 정치적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경고다. 미국에서 교회 탄압은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 특징으로 인식된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내란 특검을 앞세워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탄압한다면, 미국은 말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이재명과 좌파세력을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내란 특검이 앞다투어 트럼프 대통령 들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이들의 광기가 잠시 사그라들었다. 이것은 이미 억제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압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다.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면 안 된다.

기독교 보수주의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트럼프의 경고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김연표 디지털 크리에이터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8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